

사회보장지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원 종 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1. 서 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에 따라 복지지출과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연증가율이 높은 사회보험 부문 및 일반재정복지지출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을 OECD SOCX(평균) 기준으로 전망해 본 결과, 2015년 현재 GDP 대비 11.0%(2015년 기준)인 지출 수준은 2050년 26.6%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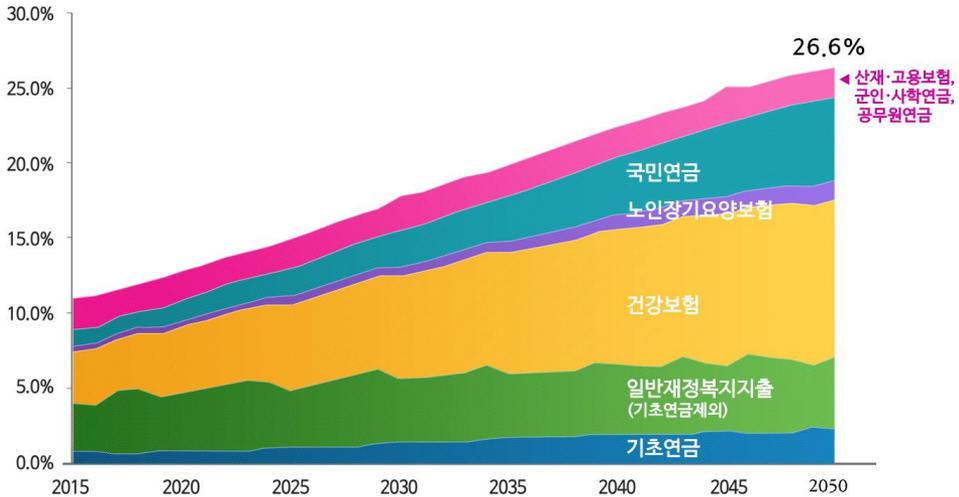
특히 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2015년 일반재정지출(기초연금 포함)과 사회보험의 비중이 각각 35.13%, 64.87%이나, 2050년에는 26.52%, 74.48%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건강보험지출이 53조 원(GDP 대비 3.60%)으로 가장 높고, 2050년에는 772조 원(GDP 대비 10.65%)으로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일반재정복지지출 중에서는 기초연금 지출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예산 기준) 10조 880억 원(국비 7조 5820억 원-지방비 2조 5060억 원)에서 2030년 47.1조 원, 2050년 150.0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지출이 급증하는 것은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과 급여수준이 A값(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증가율에 연동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 본 원고는 2015년도 한국경제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동계 정책 심포지엄(2015. 11. 20(금),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한국경제의 진화와 그 대응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그림 1> 주요 사회보험제도별 지출 장기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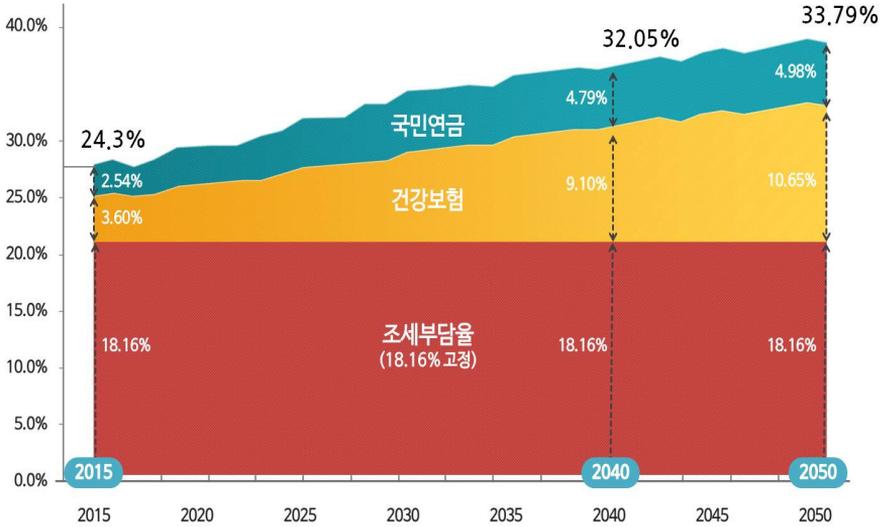


자료: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KIHASA, 2014.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부담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은 매년 적자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을 통해 지출을 충당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적립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기초연금과 보육료지원 등 조세로 충당되는 제도의 지출수준도 급증하나 조세부담은 공식적으로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현재 국민부담율은 24.3%(조세부담율 18.16%, 사회보험부담율 6.14%)인데, 이는 OECD 평균 33.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전제하는 경우, 즉, 국민연금 보험료율 9%(2015-2017) → 11%(2018-2022) → 13%(2023-2027) → 16%(2028년 이후) 현재 2.54%인 사회보험(국민연금분) 부담율이 2050년에 4.9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지출을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 2015년 3.6%인 사회보험(건강보험분) 부담율이 2050년 10.6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6.07%인 건강보험료율의 지속적인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50년 예상되는 국민부담율 33.79% 중 53.5%는 조세부담율이고 나머지 46.5%는 사회보험부담 비중이며, 33.79%는 OECD 평균(2050년 기준 35.92%)에 비해 2.13% 낮은 수치이다. 이는 사회보험부담율 인상만을 전제로 한 전망이므로 실제 국민부담율은 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반재정복지지출의 증가와 공공행정 및 국방 등 타 부문의 지출 수요를 고려한다면 조세부담율 또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국민연금/건강보험지출 및 조세부담율 추세 전망(2015-2050)



자료: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KIHASA, 2014.

2.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고찰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지출과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파급효과는 지출수준이 낮은 시점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대표적으로 노인계층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회적 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1) 기초연금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초연금은 2015년 기준 약 10조원에 반해 2050년에는 약 160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2011년 기준 48.6%로 OECD 평균 10.9%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기초연금의 비용 대비 정책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자산(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됨에 따라 기초연금(정부지출) 지급이 노인가구의 소득 불평등도 완화 정도와 경제 순환 과정에서 야기하는 생산과 소득 효과, 즉, 산업 각 부문의 생산 증가가 전 계층의 소득창출 효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타 부문 정부지출 감소를 통한 자원마련(재정효율화 방식),

두 번째는 소득세 증가와 가계소비지출 감소를 통한 추가적인 조세 부담 방식(tax financing)이다.

2) 건강보험

또한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험 중 하나로서 지출규모는 2015년 기준 약 53조 원으로 다른 사회보험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지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2013년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에 따르면, 건강보험지출은 2050년 기준 772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을 중심으로 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효과의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즉, 현재 가장 큰 지출규모를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정책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즉, 가계의 건강보험 지출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됨에 따라 경제순환 과정에서 야기하는 생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지출증가 전후 생산유발효과와 가계 소득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때,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기초연금과의 비교를 위해 2015년 기초연금 예산인 10조 880억 원만큼 증가시키는 경우를 설정하였다.

3. 거시/미시사회계정행렬 구축

1) 거시사회계정행렬

거시사회계정행렬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하여 제도 부문의 수입, 지출 구조를 연계한 화폐흐름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소득 순환 흐름에 부합하는 특징을 갖는다. 다음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 체제의 소득순환을 바탕으로 하여 각 부문의 소득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표현하며, 산업연관표 및 국민계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아울러 <표 1>과 같이 생산활동, 상품, 노동요소, 자본요소, 가계, 기업, 정부, 자본계정, 해외의 9개 계정으로 구성되며, 부문간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가정 하에 작성된다. 거시 SAM에 나타난 생산활동과 상품계정은 산업연관표의 총량수치를 이용하여 채워지는 것으로 국민소득계정의 다른 계정들과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표시된다(고제이 외, 2014).

2) 미시사회계정행렬

거시사회계정행렬은 우리나라 경제의 소득 순환을 바탕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미시적인 분석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미시사회계정행렬(이하 미시 SAM)의 작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거시사회계정행렬의 각 부문별 수치를 제어치로 삼는다. 사회계정행렬의 규모는 분석 목적과 가용자료에 따른 각 계정의 세분화 정도에 의해 결정

<표 1> 거시사회계정행렬의 구조

지출 수입	①생산 활동	②상품	③노동 ¹⁾	④자본 ¹⁾	⑤가구	⑥기업	⑦정부	⑧자본 계정	⑨해외 부문	합계
①생산 활동		국내 공급							수출	총산출
②상품	중간재 수요				가구소비		정부지출	투자		총수요
③노동	피용자 보수								국외수취 피용자보수	노동 소득
④자본	영업 잉여								국외수취 기업·재산 소득	자본 소득
⑤가구			임금	분배 이윤		이전거래	이전거래		경상이전	가구 수입
⑥기업				비분배 이윤	이전거래		이전거래		경상이전	기업 수입
⑦정부	생산세	수입생 산물세			소득세	법인세			경상이전	정부 수입
⑧자본 계정 ²⁾	감가 상각				가구저축	기업저축	정부저축		경상계정 잉여(흑자)	총저축
⑨해외 부문		輸入	국외지급 피용자 보수	국외지급 기업·재 산소득	민간해외 이전지출	기업해외 이전지출	정부해외 이전지출	경상계정 잉여(적자)		외환 지불
합계	총투입 (생산 비용)	총공급	노동소득	자본소득	가구지출	기업지출	정부지출	총투자	외환수취	

주: 1) 정부 고용 피용자도 정부가 아닌 가구구성원의 일부로 간주하므로 정부계정의 생산요소로부터의 수입은 0임.
 2) 자본계정(⑧)은 생산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감가상각과 가구·기업·정부의 저축,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순자본이전을 모아 상품 및 해외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생산요소로서의 자본(④)과는 다름.
 자료: 고제이 외(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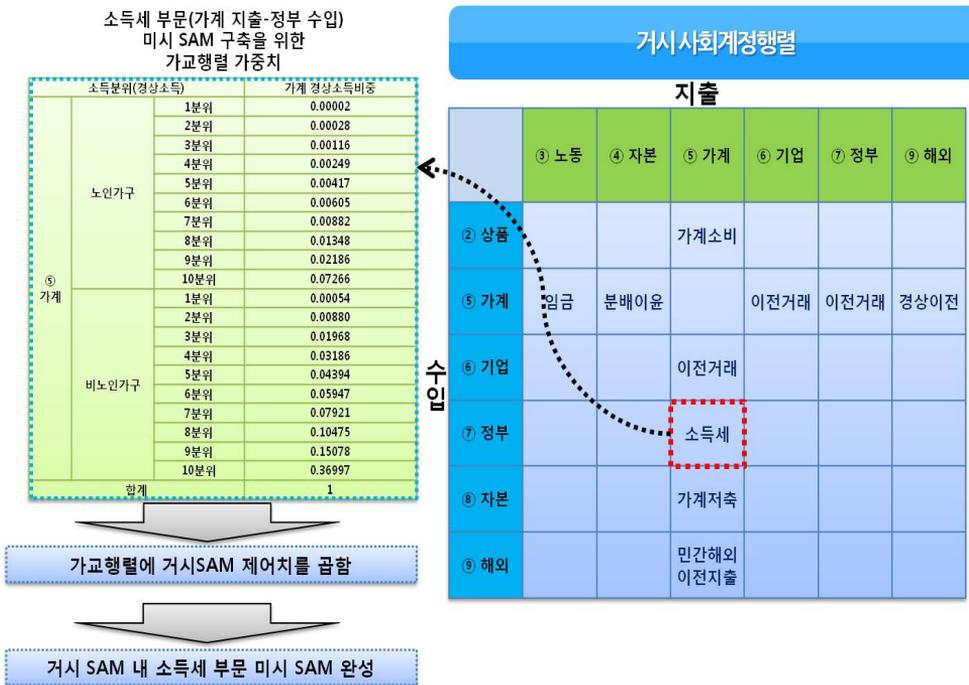
되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초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거시 SAM을 제어수치로 삼아 미시 SAM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거시통계와 표본조사자료의 연계를 위한 ‘가교행렬’(bridge matrix)의 작성이 필요하다(노용환, 2006).¹⁾ 예를 들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계층별 소득분배’를 다루는 경우 경제 주체간 경상이전거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산업연관표」 상 부가가치 배분에 관한 기능별 소득분배에 관한 정보 외에 소득계층별 수입·지출에 관한 자료가 요구된다(고제이 외, 2014). 이러한 과정은 소득세 부문을 예시로 한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SAM의 유형은 관찰목적인가 아니면 분석목적인가에 따라 계정 구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관찰목적 SAM의 경우 연도별·국가별 등 비교대상에 따라 세부 계정의 유형이 결정되며, 분석목적 SAM의 경우는 연구자 목적에 부합하는 계정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내생계정인 가구 분류시 소득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주요 소득원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제이 외, 2014).

본 연구에서의 미시 SAM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계정금액과 가구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연계성을 위한 가교행렬 작성을 위해, 생산활동, 상품계정 중 다음의 항목은 1)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30부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소분류 기준으로 하여 '의료 및 보건', '사회보험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기초연금 도입의 효과는 사회보험서비스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거시 SAM 중 가구 부문의 미시분할(노인-비노인가구, 각각의 가구별 자산 10분위)이 필요한 계정이 존재한다. 가구 지출과 가구 수입 부문의 경우, 가구금융복지조사와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을 노인-비노인가구로 2단계 구분, 이후 각 가구를 자산 10분위나 소득 10분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한데 노인가구의 경우 (경상)소득이 매우 미미하므로, 자산(소득인정액) 10분위로 구분하였다.

해당 가교행렬을 바탕으로 가구가 20분위로 나누어진 관계로, 생산, 상품 64개 항목(각 32개 부문), 요소(노동, 자본) 2개 항목, 가구 20개 항목(노인가구 10분위, 비노인가구 10분위), 기업, 정부, 자본계정, 해외부문)의 총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였다. 즉, 총 90×90 행렬 $\{(64+2+20+4) \times (64+2+20+4)\}$ 로 나타나는 사회계정행렬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시가교행렬을 구축하는데 사용된 데이터는 2014가계금융복지조사와 2010가구동향조사 원시자료이다.

<그림 3> 미시사회계정행렬의 구축과정 : 소득세 부문의 예



4.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 기초연금 자원 마련 시나리오

먼저 첫 번째로 기초연금의 재원이 복지 이외의 공공행정 및 국방 등 타 부문 정부지출의 감소를 바탕으로 마련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재정효율화라고 명명하였다. 이를 위해 구축된 미시사회계정행렬에서 각 산업 부문에 도달되는 정부지출금액 비율만큼 감액하여 2015년 기준 기초연금 예산 10조 8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에서 약 5조 원이, 의료 및 보건 부문에서 2조 3천억 원, 교육서비스 부문에서 약 2조 2천억 원이 각각 감액되어 재원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들 세 부문의 비중은 정부지출이 산업 부문으로 이전되는 금액의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조세 부담(tax financing)으로 기초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대안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대안을 상정하였다. 즉, 가계는 가계 지출, 상품 수입의 가계소비 계정을 감소시키고 추가적인 조세 부담으로 소득세(가계→정부)를 늘리는 대안이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증가한 만큼 가계 소비지출이 각 분위별 비율대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였고, 이는 다음 하단의 각각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이 경우는 기초연금 자원 마련을 위해 가계 자산 20분위로 구분한 각 가구의 기존 소득세 비율대로 소득세를 더 증액시키고, 기존 가계소비 지출 비율만큼 소비지출이 감소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를 거시사회계정행렬에서 살펴보면, 가계 계정의 지출과 상품 계정의 수입 항목인 「가계소비」 항목이 감소하는 반면, 가계 계정의 지출과 정부 계정의 수입 항목인 「소득세」 부문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때 추가적인 조세 부담 대안에 대한 「소득세」 항목에서의 증가액(이에 대응하는 「가계소비」 항목의 감소액)의 크기는 정확하게 2015년 기초연금 예산 소요액인 10조 880억 원이다.

2) 기초연금 가계 지급 시나리오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이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대해 2015년 기준 기초연금 예산액 10조 8백 8십억 원이 가계 분위별로 동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 구축된 거시사회계정행렬에서 정부지출이 가계에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 제어치는 약 43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가구, 비노인가구의 기초연금 공적이전소득 분포를 구하고, 이 금액 중 노인가구 소득인정액(자산) 하위 70%에만 각각 10조 8백 8십억 원을 7로 나눈 금액인 1조 4천 4백억 원을 분위별로 지급하는 것을 상정한 것으로 기초연금이 노인 가구 70%에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이 기존 노인계층에 대해 2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며, 차등 대상자가 극히 적다는 것을 감안한 결과이다.

3) 경제적 파급효과

(1) 재정효율화 방식

가. 생산유발효과

본 연구는 재정효율화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 부문으로 지급(지출)되어야 할 정부 재원이 기초연금으로 노인가구 하위 70%에 지급됨에 따라 생산유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단위 1원의 매출, 수요 증가는 직, 간접적으로 국가경제에 생산유발계수만큼인 3.3388, 3.2986원 만큼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초연금 지급 이후 모든 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미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식료품(3), 도·소매 서비스(19)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이 작은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26), 의료 및 보건(29), 사회보험서비스(30), 사회복지서비스(31) 부문의 경우 생산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본 표의 생산유발효과는 개별산업이 미치는 승수이므로, 생산유발에 대한 절대적 크기는 산업의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감소는 우리 경제의 산업연관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표 2> 재정효율화 방식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 전후 생산유발효과 비교

분류	1	2	28	29	30	31	32	전산업 평균
기초연금 지급 전	2.7491	2.7312	3.0929	3.0890	3.3388	3.2986	3.0569	3.0028
기초연금 지급 후	2.6353	2.6204	2.9082	2.9103	3.1426	3.1109	2.9436	2.7470
변화율(%)	-4.14%	-4.05%	-5.97%	-5.78%	-5.88%	-5.69%	-3.71%	-3.94%

주: 1) 변화율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32개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평균값에 대한 기초연금 전후 변화율을 뜻하며, 10조 원의 경제순환 과정 상의 효과만을 측정된 것으로 경제성장률 변화와는 무관함.

2) 1:농림수산업, 2:광산품, 28: 교육서비스, 29:의료 및 보건, 30:사회보험서비스, 31:사회복지서비스, 32:문화 및 기타서비스 등 기본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번호임.

나. 소득유발효과

가구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 소득분위별 계층에 대한 소득유발효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구축한 사회계정승수행렬 중 각 산업부문 지출(각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가구 분위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생산유발효과 분석과 유사하게 기초연금 지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이전 기준으로 소득유발효과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1.1178), 사회보험서비스(1.1089), 교육서비스

(1.0862)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지급 이후에는 모든 부문의 소득유발계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절대적 크기는 0.01정도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의료 및 보건(29), 사회보험서비스(30), 사회복지서비스(31), 문화 및 기타서비스(32) 산업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급여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기초연금의 소비 등으로 인한 경제순환에 따른 가구의 소득창출효과는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달리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기초연금 지급 이후 음식료품 산업(3)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득유발계수가 각각 0.2440, 0.4641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각각 34.45%, 65.54%의 비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지급 이후 파생된 음식료품 산업의 소득창출액 중 노인가구가 34.45%, 비노인가구가 65.54%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노인가구-비노인가구 모두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소득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소득(자산) 유발효과가 큰 경제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초연금수급과 기초연금의 경제 순환 후 노인가구의 가구소득창출 효과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 기초연금 지급 전후 소득유발효과 비교

분류	1	2	26	27	28	29	30	31	32	전산업 평균
기초연금 지급 전	0.6358	0.7221	1.0357	0.8858	1.0862	0.8624	1.1089	0.9151	0.7613	0.7250
기초연금 지급 후	0.6256	0.7108	1.0216	0.8602	1.0559	0.8577	1.0987	0.9074	0.7544	0.7121
변화율(%)	-1.60%	-1.57%	-1.36%	-2.90%	-2.79%	-0.55%	-0.92%	-0.84%	-0.91%	-1.78%

주: 1) 평균값은 32개 산업의 가계 소득유발효과의 평균값을, 변화율은 기초연금 지급 전후 10조 원의 지출에 따른 변화율을 의미하며 경제 전반의 소득변화율이 아님(이하 동일).

2) 3-25산업은 중략함.

〈표 4〉 기초연금 시나리오 1(재정효율화)에 따른 주요 부문 및 전 산업 평균의 노인-비노인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유발계수 및 변화율 비교

가구	1	2	3	4	5	6	7	8	9	10	29	30	31	32	전산업 평균
노인가구	0.2381	0.2707	0.2440	0.2494	0.2669	0.0515	0.1883	0.2083	0.1996	0.2410	0.3632	0.4686	0.3847	0.3198	0.2803
	-0.95%	-0.87%	-0.51%	-1.08%	-0.87%	-0.86%	-0.98%	-1.29%	-1.07%	-1.39%	-0.22%	-0.47%	-0.42%	-0.46%	-1.03%
비노인가구	0.3875	0.4401	0.4641	0.4040	0.4314	0.0832	0.3841	0.3374	0.3240	0.3900	0.4945	0.6301	0.5228	0.4345	0.4318
	-1.99%	-1.99%	-1.30%	-2.56%	-2.54%	-2.54%	-2.15%	-2.76%	-2.36%	-2.95%	-0.79%	-1.25%	-1.15%	-1.24%	-2.33%
합계	0.625	0.7108	0.7081	0.6533	0.6983	0.1347	0.5724	0.5457	0.5236	0.6310	0.8577	1.0987	0.9074	0.7544	0.7121
	-1.60%	-1.57%	-1.03%	-2.00%	-1.91%	-1.90%	-1.77%	-2.20%	-1.87%	-2.36%	-0.55%	-0.92%	-0.84%	-0.91%	-1.78%

주: 11-28 산업은 중략함.

(2) 추가적인 조세부담 방식

가. 생산유발효과

두 번째 시나리오인 소득세 증가(투입)와 이에 대한 가계소비지출 감소(추출)로 설정한 추가적인 조세부담 방식(tax financing)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음식료품산업(3)의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341→3.4376).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앞서 살펴본 재정효율화 방식에 비해 기초연금 지급 이전보다 감소폭이 작다는 점이다. 즉, 이는 소득세와 같이 추가적인 조세부담보다는 타 부문 정부지출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더 큰 기회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두 가지 대안 중 추가적인 조세 부담 방식이 경제성장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효율화 방식과 추가적인 조세부담 방식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표 5〉 추가적인 조세부담(소득세 증가)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 전후 생산유발효과 비교

분류	1	2	28	29	30	31	32	전산업 평균
기초연금 지급 전	2.7491	2.7312	3.0929	3.0890	3.3388	3.2986	3.0569	3.0028
기초연금 지급 후	2.7011	2.6859	2.9809	2.9831	3.2211	3.1887	3.0172	2.9565
변화율(%)	-1.75%	-1.66%	3.62%	-3.43%	-3.52%	-3.33%	-1.30%	-1.54%

주: 1) 변화율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32개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평균값에 대한 기초연금 전후 변화율을 뜻하며, 10조 원의 경제순환 과정 상의 효과만을 측정된 것으로 경제성장률 변화와는 무관함.
2) 3-27산업은 중략함.

나. 소득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역시 산업 전 부문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재정효율화 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생산 활동 부문의 가구 분위별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감소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재정효율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증가와 소비지출 감소를 전제한 재원 조달 방식은 모든 산업 부문에서의 소득유발효과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생산유발효과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으로서, 가계 소득을 유발시키는 것을 더 견지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효율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기회비용을 덜 감내하여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기초연금 지급 전후 소득유발효과 비교

분류	1	2	26	27	28	29	30	31	32	전산업 평균
기초연금 지급 전	0.6358	0.7221	1.0357	0.8858	1.0862	0.8624	1.1089	0.9151	0.7613	0.7250
기초연금 지급 후	0.6092	0.6864	0.9917	0.8331	1.0272	0.8306	1.0611	0.8742	0.7297	0.6884
변화율(%)	-4.18%	-4.95%	-4.25%	-5.95%	-5.43%	-3.69%	-4.31%	-4.47%	-4.16%	-5.05%

주: 1) 평균값은 32개 산업의 가계 소득유발효과의 평균값을, 변화율은 기초연금 지급 전후 10조 원의 지출에 따른 변화율을 의미하며 경제 전반의 소득변화율이 아님.

2) 3-25산업은 중략함.

<표 7> 기초연금 시나리오 2(추가적인 조세부담)에 따른 주요 부문 및 전 산업 평균의 노인-비노인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유발계수 및 변화율 비교

가구	1	2	3	4	5	6	7	8	9	10	29	30	31	32	전산업 평균
노인 가구	0.2317	0.2627	0.2355	0.2431	0.2602	0.0497	0.1820	0.2008	0.1927	0.2329	0.3494	0.4523	0.3709	0.3076	0.2705
비노인 가구	-3.61%	-3.81%	-3.99%	-3.56%	-3.36%	-4.32%	-4.30%	-4.84%	-4.50%	-4.71%	-4.00%	-3.93%	-3.99%	-4.27%	-4.47%
노인-비노인	0.3775	0.4237	0.4545	0.3891	0.4194	0.0801	0.3697	0.3220	0.3105	0.3749	0.4812	0.6088	0.5033	0.4220	0.4179
비노인-노인	-4.52%	-5.64%	-3.35%	-6.15%	-5.25%	-6.17%	-5.80%	-7.20%	-6.43%	-6.71%	-3.46%	-4.58%	-4.83%	-4.08%	-5.50%
합계	0.6092	0.6864	0.6899	0.6322	0.6796	0.1298	0.5517	0.5228	0.5032	0.6078	0.8306	1.0611	0.8742	0.7297	0.6884
	-4.18%	-4.95%	-3.57%	-5.17%	-4.54%	-5.47%	-5.31%	-6.31%	-5.70%	-5.95%	-3.69%	-4.31%	-4.47%	-4.16%	-5.05%

주: 11-28 산업은 중략함.

(3)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본 절에서는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 지니계수를 통해 파악하였다. 지니계수가 0일 경우 완전균등분배로서 소득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1일 경우에는 완전불균등분배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미시사회계정행렬 구축을 위해 사용되었던 2014 가구금융복지조사 자료는 기초연금 도입(2014.7) 이전 자료이므로,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4년 상반기(기초연금 도입 전), 2014년 기초연금 지급(2014년 말), 2015년 기초연금 지급(2015년 말)로 기간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노인가구 자산 기준 하위 70% 가구의 노인에 대해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20만원(2014년 기준 중앙, 지방 총 예산 6조 9천억 원), 2015년 기초연금 20만원(2015년 기준 중앙, 지방 총 예산 10조 8백 8십억 원)을 지급하며, 노인 가구의 가구수입 중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래 기초연금의 지급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분석의 편의를 위해 미시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기 위한 가교행렬을 가구금융복지조사의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아울러 노인가구의 총 가처분소득 금액은 한국은행 국

민계정에서 계산된 2014년 기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가구금융복지조사에서 노인가구/(노인가구+비노인가구) 가처분소득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표 8>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분위별 비중

소득 분위	비중
1분위	0.002745
2분위	0.029637
3분위	0.038577
4분위	0.04666
5분위	0.056063
6분위	0.068644
7분위	0.087761
8분위	0.115138
9분위	0.168951
10분위	0.385825
합계	1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먼저 2014년 상반기, 기초연금 도입 전 노인가구 분위별 가처분소득 분포는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분위별 비중에 2014년 기준 노인가구 총처분가능소득을 각각 곱하여 도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때의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가구 지니계수는 0.4944로 계산되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모두 이전거래의 특성을 지니고, 과세 제외 항목이므로 가처분소득이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 9>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분위별 분포 변화

(단위: 억 원)

소득 분위	가처분소득		
	2014년 상반기 (기초연금 도입 전)	2014년 말 (기초연금 도입 후)	2015년 말 (2015년 기초연금 지급 후)
1분위	2,184	12,042	16,596
2분위	23,581	33,438	37,992
3분위	30,695	40,552	45,106
4분위	37,127	46,984	51,538
5분위	44,608	54,465	59,019
6분위	54,618	64,475	69,029
7분위	69,829	79,686	84,240
8분위	91,612	91,612	91,612
9분위	134,430	134,430	134,430
10분위	306,991	306,991	306,991
합계	795,675	864,675	896,554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2014년 하반기, 2014년 기초연금(중앙, 지방정부 합계) 예산 6조 9천 억 원을 노인가구 하위 70%에 분위별(1분위부터 7분위까지) 모두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10분위 분포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역시 0.4322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즉, 이 때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1분위부터 7분위까지 각 분위에 동일한 금액 9천 8백 57억원(6조 9천억 원÷7)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을 때, 10분위 분포 변화와 함께 지니계수가 낮아져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초연금(중앙, 지방정부 합계) 예산 10조 8백 8십억 원을 노인가구 하위 70%에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10분위 분포는 <표 10>와 같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역시 0.4067로 2014년에 비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 경우는 2014년 기준 가처분소득 분포를 바탕으로 도출된 기준 지니계수이므로, 2015년 총가처분소득 분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결과는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가구 하위 70%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가처분소득 10분위의 지니계수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명확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이 많아지고, 하위분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10> 기초연금 지급 전, 후 지니계수 비교

기간	지니계수
2014년 상반기 : 기초연금 도입 전	0.4944
2014년 7월~12월 : 2014년 기초연금 지급	0.4322
2015년 기초연금 지급	0.4067

5. 건강보험

1) 지출증가와 부담의 전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지출이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분은 비노인가구의 보건 및 의료 산업 부문을 제외한 타 부문 소비지출의 감소로 충당된다. 또한 이러한 증가분만큼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보건 및 의료 산업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때 소비지출의 감소와 증가는 이미 지출되고 있는 소비지출의 부문별 비율대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므로, 사회계정행렬 상에서 이를 명확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출되고 있는 노인, 비노인가구의 각 부문 소비지출의 비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먼저,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통해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각 10분위별 각 항목 지출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는 고제이 외(20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분위별 산업별 가계 지출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분류를 산업연관표와 연관시켜 파악한 것이다.

노인-비노인가구 소득 10분위별 산업 부문 소비지출 비율을 구하여 32x20의 가교행렬을 구하고 이를 거시사회계정행렬의 가계 지출-상품 수입(가계소비)의 제어치에 곱하면, 32X20의 가계 소비 부문 미시사회계정행렬이 완성된다.

기초연금과의 비교를 위해 2015년 기초연금 예산인 10조 880억 원만큼 증가시키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보험료 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보험급여비와 함께 관리운영비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의 특성에 따라 건강보험지출은 모두 사회계정행렬의 가계 지출-상품(29. 보건 및 의료) 수입 항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상에서 증가되는 보험료 지출은 근로세대로 설정한 비노인가구의 타 부문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만큼 전체 세대의 보건 및 의료 산업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표 11> 사회계정행렬 분석을 위한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구분	내용
전제	- 건강보험지출을 사회계정행렬 상의 가계 지출-상품(29. 보건 및 의료) 수입 항목의 증가로 설정
지출증가 시나리오	- 건강보험지출이 2015년 기초연금 예산(10조 881억 원)만큼 증가 - 근로세대(비노인가구)의 타 부문 소비지출 감소, 전체 세대의 29. 보건 및 의료 산업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

먼저, 건강보험지출 증가를 외생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내생적으로 근로세대(비노인가구)의 타 부문 소비지출이 비율대로 감소하여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비노인가구의 소비지출 미시사회계정행렬에서 보건 및 의료산업의 소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비율을 구하고, 이를 감소분에 각각 곱해주면, 근로세대의 타 부문 소비지출 감소분 31개 산업별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근로세대 각 분위 및 산업별 소비지출 감소분은 각 분위별, 산업별 소비지출 비율을 구하고 이에 마찬가지로 감소분에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이들의 합은 모두 건강보험지출 증가분이 된다.

앞서 체계적으로 구축한 바와 같이 근로세대에 대한 보건 및 의료 산업 부문을 제외한 타 부문의 소비지출을 비율대로 감소시킨 만큼(시나리오에서 설정한 2014년 기준 건강보험지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세대에 기존 지출 비율대로 증가하는 것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시사회계정행렬에서 의료 및 보건 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부분, 즉, 1×20행렬만을 따로 추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각 노인, 비노인가구의 의료 및 보건 산업에 대한 기존 소비지출 비율을 파악하여 이의 비율만큼 증가시키기 위한 선결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생산유발효과

기초연금지출증가와의 비교를 위해 2015년 기초연금 예산액인 10조 880억 원 규모로 건강보험지출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근로세대(노인이 없는 가구)의 보건 및 의료 산업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소비지출을 비율대로 감소시키고, 전 가구의 보건 및 의료 산업 부문의 소비지출을 증가시켰다. 이 때 증가 및 감소 비율은 동일하며, 제어치인 증가금액만 달라지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의 제도별 재원 조달을 각각 달리 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수월하게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한 것이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음식료품(3) 산업의 경우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341→3.2774). 반면, 보건 및 의료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890→3.2319).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감소하였는데, 사회보험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시나리오 상 비노인가구의 소비지출 감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크게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그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건 및 의료 산업을 제외한 타 부문의 소비지출을 기존 지출비율대로 감소시켰으며, 특히 30.사회보험서비스, 31.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경우 소비지출(수입)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유일하게 소비지출(수입)이 증가한 29. 보건 및 의료 산업과의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큰 감소폭을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12> 추가적인 건강보험지출(2015년 기초연금 예산액만큼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비교

분류	1	2	3	4	5	6	7	8	9
전	2.7491	2.7312	3.4341	3.2922	3.4363	1.6541	3.0702	2.8828	3.2655
후	2.6625	2.6815	3.2774	3.1739	3.3646	1.6063	2.9990	2.8424	3.2221
변화율(%)	-3.15%	-1.82%	-4.56%	-3.59%	-2.09%	-2.89%	-2.32%	-1.40%	-1.33%
분류	10	11	27	28	29	30	31	32	평균값
전	3.0868	3.0926	2.7776	3.0929	3.0890	3.3388	3.2986	3.0569	3.0028
후	3.0367	3.0265	2.7318	3.0119	3.2319	3.3022	3.2512	2.9867	2.948
변화율(%)	-1.62%	-2.14%	-1.65%	-2.62%	4.63%	-1.10%	-1.44%	-2.30%	-1.82%

가.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동일한 금액 증가 시 비교)

특히, 앞서 살펴본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을 동일한 금액으로 비교한 결과를 통해 타 부문 정부지출 감소를 바탕으로 한 재정효율화의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조세 부담으로 기초연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타 부문 소비지출 감소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재정효율화보다는 생산유발효과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 부문에 추가적인 지출을 투입하는 것이 가계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생산유발

효과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3>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동일한 금액) 생산유발효과 비교

분류	1	2	3	4	5	6	7	8	9
전	2.7491	2.7312	3.4341	3.2922	3.4363	1.6541	3.0702	2.8828	3.2655
기초연금 (재정효율화)	2.6353	2.6204	3.3537	3.1796	3.3222	1.6000	2.9735	2.7906	3.1634
기초연금 (조세부담)	2.7011	2.6859	3.4376	3.2590	3.4052	1.6400	3.0478	2.8603	3.2425
건강보험	2.6625	2.6815	3.2774	3.1739	3.3646	1.6063	2.9990	2.8424	3.2221
분류	10	11	27	28	29	30	31	32	전산업 평균값
전	2.7491	2.7312	3.4341	3.2922	3.4363	1.6541	3.0702	2.8828	3.2655
기초연금 (재정효율화)	2.9892	2.9952	2.6037	2.9082	2.9103	3.1426	3.1109	2.9436	2.8844
기초연금 (조세부담)	3.0639	3.0700	2.6688	2.9809	2.9831	3.2211	3.1887	3.0172	2.9565
건강보험	3.0367	3.0265	2.7318	3.0119	3.2319	3.3022	3.2512	2.9867	2.948

주: 12-26산업은 중략.

(2) 소득유발효과

주목할 만한 사항은 건강보험지출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한 근로가구의 타 부문 소비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9. 보건 및 의료산업에 대한 근로가구의 소득유발계수가 은퇴가구의 소득유발계수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근로가구 2.21% 증가, 은퇴가구 1.42% 증가).

<표 14> 주요 부문 및 전 산업 평균의 노인-비노인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유발계수 및 변화율 비교

가구	1	2	3	4	5	6	7	8	9	10	29	30	31	32	전산업 평균
노인 가구	0.2346	0.2667	0.2404	0.2457	0.2629	0.0507	0.1855	0.2052	0.1966	0.2374	0.3692	0.4616	0.3789	0.3151	0.2765 (0.2705)
	-2.43%	-2.35%	-1.99%	-2.56%	-2.35%	-2.34%	-2.46%	-2.76%	-2.54%	-2.86%	1.42%	-1.95%	-1.90%	-1.95%	-2.42% (-4.47%)
비노인 가구	0.3772	0.4282	0.4495	0.3951	0.4220	0.0814	0.3744	0.3305	0.3163	0.3826	0.5094	0.6100	0.5058	0.4207	0.4223 (0.4179)
	-4.59%	-4.63%	-4.40%	-4.69%	-4.66%	-4.67%	-4.60%	-4.76%	-4.67%	-4.81%	2.21%	-4.39%	-4.37%	-4.40%	-4.45% (-5.50%)
합계	0.6118	0.6949	0.6899	0.6408	0.6849	0.1321	0.5599	0.5357	0.5130	0.6200	0.8786	1.0717	0.8847	0.7357	0.6988 (0.6884)
	-3.77%	-3.77%	-3.57%	-3.88%	-3.79%	-3.79%	-3.90%	-4.00%	-3.86%	-4.07%	-1.88%	-3.35%	-3.33%	-3.36%	-3.67% (-5.05%)

주: 1) 11-28 산업은 중략함.

2) 괄호 안은 기초연금(추가적인 조세 부담)의 소득유발계수에 대한 값임.

6. 결론

본 연구는 2014년 가구금융복지조사와 2010년 가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여,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의 생산유발, 소득유발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사회보장성 현금급여)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유발효과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진하나, 노인 가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감소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경제성장 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 감내하더라도 노인 가구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 고령화로 노인계층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큰 경제순환경로로 경제와 선순환될 수 있는 실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연금의 재원 조달을 재정효율화와 추가적인 조세 부담의 두 가지 대안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유발효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 만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수립, 시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세와 같은 추가적인 조세 부담보다는 타 부문의 정부지출을 감소하여 이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재정효율화 방식의 경우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더 큰 기회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소득유발효과는 이와는 반대되는 양상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가계 소득을 유발시키는 목적을 취하는 정책이라면, 재정효율화 방식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작은 손실을 감내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건강보험의 경우 분석을 위해 설정한 시나리오인 건강보험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은 근로세대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을 상정한 결과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로 인해, 보험료 인상은 경제 전반의 생산유발효과의 감소로 이어져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성장률 저하를 설명하는 경로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제이 · 노용환 · 오미애 · 이우진 · 최현수 · 장인수 · 최요한 (201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16.
- 고제이 · 유태현 · 이재원 · 조성규 · 주만수 · 손지훈 (2014),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4-05.
- 노용환 (2006), “사회회계행렬을 통해 본 한국경제의 소득재분배구조 분석,” 『경제분석』, 12(2),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p.67-10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w.go.kr).

보건복지부 예산자료.

안근원 · 구세주 · 정지선(2011),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경제모형 개발 연구(I),”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총서 2011-02.

원종욱 외 (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발간예정), 2015.

원종욱 외 (2015),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작업반 운영(인구복지 분야),” 한국개발연구원 수탁연구보고서(발간예정), 2015.

통계청, 2010년도 가구동향조사 원시자료.

통계청, 2014년도 가구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

한국은행 (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201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

Defourmy, Jacques and Erik Thorbecke (1984), “Structural Path Analysis and Multiplier Decomposition within a Social Accounting Matrix Framework,” *Economic Journal*, 94(373), pp.111-136.

EC (2003), Handbook on Social Accounting Matrices and Labor Accounting - Leadership group SAM.

Pyatt, Graham (1988), “A SAM Approach to Modeling,” *Journal of Policy Modeling*, 10(3), pp.327-352.

Pyatt, Graham and Jeffery I. Round (1979), “Accounting and Fixed Price Multipliers in a Social Accounting Matrix Framework,” *Economic Journal*, 89(356), pp.850-873.